

경찰,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수사

수자원공사 간부가 유출

결혼정보업체 대표 거쳐 기자에 전달
출처 감추려고 작성자 수공→TF로 변경

언론에 유출된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는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고서가 수공 고위간부→결혼정보업체 대표→언론사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 유출목적에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모(55)씨를 지난 23일 소환, 조사한 결과 보고서 유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공 기술본부장 김씨가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니는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40)씨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대표 김씨는 37쪽 보고서를 첫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게 복사본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공 기술본부장 김씨에 대해 수자원공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상 비밀누설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공 기술본부장 보고서 작성자를 '수공'에서 'TF'로 변경=김 본부장은 경찰조사에서 "P사 대표 김모(40)씨가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다'고 해 지난달 28일 학교에서 보고서를 넘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사 대표 김씨와는 특별한 관계는 아니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수공 본부장 김씨는 37쪽 보고서의 작성자를 '수자원공사'에서 'TF'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이 압수한 수공 조사기획팀 보고서와 비교하면 작성자만 다르고 분량과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공 본부장 김씨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를 대비해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로 작성자를 수정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가 단순히 친분관계 때문에 결혼정보업체 대표에게 보

고서를 넘겼다는 진술을 의심해 하는 대목이다.

◇보고서 유출 일주일 만에 언론보도=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달 28일 김 본부장에게 넘겨받은 보고서를 곧바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했다. 그는 경찰에서 "6월 1일이나 그 이전에 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에게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보고서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언론사로 넘어간 것은 길게 잡아 나흘인 셈이다. 또 37쪽 보고서의 첫 보도는 지난 4일로 보고서 유출에서 언론보도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P사는 2001년 강남구 청담동에 설립됐으며 소규모이지만 상류층을 겨냥, 정계 및 대기업 고위직을 대상으로 결혼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및 보도 경위에 경찰수사 집중=경찰 관계자는 "단순 친분관계로 언론에 보고서가 전달됐다는 데는 경찰도 의구심이 많다"며 "일단 수공 본부장과 언론사 기자와의 안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가 보도를 전제하거나 묵인하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언론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가 특정 정당 또는 대선 캠프 등에 관여가 됐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대, 서울경제연구원 압수수색=경찰은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대운하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것과 관련된 수사와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장개발위원회의 의뢰로 '수도권 물류개선을 위한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경제연구원과 배모 교수 등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3명의 연구실을 23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내용을 분석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서울시정개발위원회의 대운하 타당성 검토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 직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대와 서울경제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여론조사 결과만 '퍼나르기' 위법'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조사방법이나 표본 크기 등 부수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공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 김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5월8일 당시 김도현 후보의 선거사무

실에서 선거구민 1천500여명에게 '김도현 41.8%, 유○ 21.7%, 이○○ 20.9%, 한나라당 48.8%, 열우당 20.6%'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객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이라고 규정해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민주-신당 27일 합당

지분·대선 빛 실무 협상 매듭
탈당파 얼마나 합류할지 관심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오는 27일 합당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의 합류 여부까지 정국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은 물론 27일 이전까지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두 자리 수 이상의 의원들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 가운데 우윤근, 이영호, 김태홍 의원 등은 막판 합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4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그동안 쟁점이 돼온 민주당의 대선 빛 문제의 경우 채권자들이 대선 전까지 통합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분 문제도 5대5의 구두 합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당직자 문제도 중도신당 측에서

주장했던 50명보다 많은 80명 정도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2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속의원과 중앙위원회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통합수임기구의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결의하고 중앙선관위에 합당 등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28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현관실을 갖고 '통합민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당초 15일 합당을 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의 동맹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두 차례 합당을 연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잔류파 등을 포함한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분 문제도 5대5의 구두 합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당직자 문제도 중도신당 측에서

당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과 중도신당 측에서는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 가운데 이강래 그룹과 정대철 그룹 등이 합류한다면 최대 20명은 통합민주당 창당 전후에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통합민주당으로 합류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형국이며 정당 통합민주당에 합류할 의원들은 한 자리 수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우윤근, 김태홍, 이영호 의원 등이 합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동철, 감기정, 지병문 의원 등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당의 합당이 성사될 경우 범여권은 일단 통합민주당과 탈당파 일부와 시민사회세력이 뭉쳐진 제3지대 그룹, 친노세력이 포진한 열린우리당의 3각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은 단계적 대통합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중도개혁세력 8인 연석회의'

박상천·김한길·정동영·정대철 합의... 결과 주목

박상천 민주당 대표, 김한길 중도통합신 대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은 24일 오전 회동을 갖고 25일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을 위한 8인 연석회의'를 갖기로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용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선으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25일 오후 3시 민주당 2명, 중도통합

신당 2명, 탈당파 그룹 2명, 열린우리당 2명 등 총 8명이 중도개혁 대통합을 위한 최종 논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범여권 대통합과 관련, 각 정당파가 각기 다른 선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동을 계기로 정대철 고문 그룹과 정동영

전 의장 그룹이 27일 창당하는 통합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대철 전 고문 그룹이 통합민주당 합류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정동영 전 의장도 최근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는 점에서 친 정동영계 의원들이 통합민주당에 전격 합류,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가 이뤄진다면 대통합을 위한 각종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며 "그러나 27일로 예정된 통합민주당 출범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연대' 발족

범여 국민경선추진협동

연말 대선을 앞두고 광화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광주·전남지역 재야·종교·학계 중진과 원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통합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 광주·전남시민연대(이하 '대통합 시민연대')가 25일 발족한다.

대통합 시민연대(임시 운영위원장 이홍길 5·18기념재단 이사장)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을 위한 시민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합 시민연대에는 불교계의 지원 스님을 비롯, 각종 시민사회단체·종교·학계 대표들과 정계와 일반시민도 동참하는 등 모두 500여명이 참

여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도 범여권 일부 인사들과 친노진영 종교·시민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가칭 '국민경선추진협의회'가 25일 발족한다.

이 협의회는 범여권 통합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선주자 연석회의를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 개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따라 '민주평화국민회의'가 제안하고 범여권 내 국민경선추진위원모임이 호응해 구성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쇼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쇼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커실장식세트

미가엘 침실세트(원경장롱12자+화장대세트+침대(4)4인방) 1,990,000원 (5조한정판매)
HS-6720 비토 1,47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5인방장롱 아사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1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1350-8764

전남·북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 시외·시내 출장전문
- 체육대회·아유회
- 식탁·의자 무료지원
- 연회장 주차장 완비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시지사 (063)277-0083